

# WTO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내용은 지난 11월5일 WTO 국민연대 워크샵에서 성진근(충북대)교수가 발표한 자료이다.  
40일전에 발표된 내용임을 참고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최근 들어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원유가격의 상승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져서 물가와 국제수지관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우사태가 발등의 불이다. 대우채권 규모는 IMF사태 이후 발생한 부도기업의 총 부실채권 규모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신에 찬 대책발표에 이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11월 금융 대란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정책이 큰 문제인것 같다. 큰 원칙에 입각하기 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온 임기응변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등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개혁정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이기와 버티기, 그리고 추잡한 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당연히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경제주체들은 여전히 당당한 반면에 정책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경제주체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책 낭비로 혜택을 받은 주체들은 더욱 뻔뻔스러워졌고, 정부가 무엇을 해주었느냐는 원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경제주체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오늘의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들까지 경제위기 수습비용으로 인한 국제상환의 책임을 지게됐다.

1년 앞을 못 내다본 졸속 교육개혁 덕분에 교사부족사태가 야기되고 있다. 타지크 공화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거주 한인회 위기나 유랑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위기에는 애써 외면해온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동티모르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결정을 과감히 내렸다.

이러한 혼란속에서 어찌 백성이 정부를 믿고 따르려 하겠는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태풍이 들관을 할퀴고 지나갔다. 또 물거품이 된 사상유례 없는 풍년농사의 꿈은 물론이고 쓰러진 벼이삭을 일으켜 세우는 농민들의 한숨과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하려는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상임금이론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도살자의 직업은 불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직업보다 이득이 높다. 가장 불쾌한 사형집행인은 수행하는 작업량에 비해서 많은 보수를 받는다---』

위험하고 불쾌한 일에 대한 보상적 프리미엄이 제도적으로 지불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화나 용역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가 없다.

그러나 주곡자급이니 식량안보니 하는 구호

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벼농사의 소득을 보상하기 위한 직불제도 도입이나, 적극적인 재해보상정책의 도입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안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좋은 정책들도 실천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면서 세계무역기구 차기협상에서 개방 폭을 줄이기 위해 백성들의 힘을 모을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이란 없다. 그러므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한 정책의 역할에 대해 깊은 통찰력에 입각한 정책의 원칙이 뚜렷이 세워져야 땅에 떨어진 정책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차기 협상 3가지 대응 전략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뉴라운드)이 11월말 개최될 시애틀 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된다. 이 협상의 기본지침이 될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이 배포되었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식량 수입국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라운드는 협상 의제별로 참여국들에게 부담과 기회를 가져다준다.

미국이 이번 협상의 핵심의제로 밀어올리고 있는 농산물 분야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겹친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미국 농촌경제의 회생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에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반덤핑 제소의 남용을 저지할 수 있는 협정의 개정은 IMF경제위기를 탈출하려는 한국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한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나라이다. 그러므로 세계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점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의 국제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강하게 주장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바처럼 농산물의 추가적인 관세감축과 국내보조의 대

폭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유감스럽게도 한국 농업의 초토화는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국익(國益)을 극대화할 것인가?

첫째,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협상목표와 전략이 조정되어야 한다. 줄 것은 주되 시나리오 별로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내정책을 세우고 이를 협상전략에 연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경제정책위원회(총리실)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대응하여 제정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안이 지난 5년동안 잠자고 있는 뼈아픈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둘째, 「농업부문 왕따」적 사회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 뉴라운드의 최대 피해는 농업 부문이 입게 될 것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관세율의 인하마저도 피할 수가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논리로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새정부 들어서 농림사업예산 축소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농업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비시장적 가치마저 지속적인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새롭게 홍보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농업우호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세界的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국제협상 현장에서 정부의 협상능력을 성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국내의 농업우호세력을 확장해서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개방대응 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셋째, 쌀 시장개방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된다. 새로운 국제식량위기의 높은 가능성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다수의 식량 수입국들과 연대해서라도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쌀을 지켜 내야 한다.

최소한의 먹거리 자급능력마저 포기해버린 최악의 조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식량위기와 「맬서스」의 고민

지구인구가 60억명을 돌파하였다. 예수 탄생 무렵 2억5,000만명이었던 지구 인구가 1,800년만에 4배인 10억명으로 늘어났던 시절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류사회의 장래가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요지의 주장이었다.

따지고 보면 신대륙의 발견을 위시한 농지의 확장과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신기술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사회는 맬서스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 80억명으로 늘어날 인류를 부양할 수 있는 지구상의 신대륙은 어디에도 없다. 지하수마저도 바닥을 드러내어 앞으로 물 부족 때문에 획기적인 농산물 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더구나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등 더욱 찾아진 기상이변도 지구촌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식량수출 능력이 있는 나라는 북미대륙과 호주로 제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과점적(寡占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식량무역구조가 더욱 국제식량사정을 불안하게 한다. 수출국과 무역상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공급자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 무기화란 용어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수요측 교란요인은 더욱 위협적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체제전환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구소련과 동구권의 나라들이 경제가 호전되어 식량수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국제식량시장은 크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북부의 기름과 남부의 홍수로 식량생산이 몇 년째 감소하고 있는 중국이 쌀 소비량의 10%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은 국제곡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쌀 무역량을 능가하는 수준이 된다. 72년과 73년의 국제식량위기의 원인도 결국 소련의 흉작으로 인한 곡물의 대량수입 때문에 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내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증산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선진국의 과잉곡물 재고상태가 빚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교역으로 각국의 식량안보를 해결해 나가자는 논리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협정타결 이후 국제식량 제고율은 위험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식량수입국들의 식량자급률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계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각료급 세계회의와 세계 식량정상회의가 95년과 96년에 연이어 개최되기까지 한 것이다.

불안한 국제식량 사정에 대응하여 국내의 식량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일은 국방안보에 못지 않은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식량안보는 해당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식량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로마선언에 합당한 식량정책이 과연 확고하게 수립 집행되고 있는가?

만약 맬서스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는 고뇌하다가 미쳤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인구에 거의 필적하는 기아인구(8억 4,000만명)가 현재의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녹용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